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축산업계 위기조장

사감위의 경마산업 죽이기 본격 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경마의 영업장 추가 신설 및 시설확장 중단, 장외발매소 축소·폐지, 경마 인터넷·모바일베팅 폐지, 출입자 ID카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마규제방안을 제시하며 경마산업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 **알아드립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사행산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사감위의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한 규제로 인해 경마산업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을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경마산업 축소와 경마의 순기능 위축, 마필생산과 관련된 농축산업의 타격은 물론 이제 겨우 건전 레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경마를 다시 도박산업의 이미지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감위의 규제 방침은 건전 경마 정착과 농어촌기금 출연 노력에 역행

사감위는 객관적 입장에서 사행산업을 규제한다고 볼 수 없다. 사감위 구성에 있어 문화관광부차관이 간사를 맡고 문화관광부 직원 50여명이 사무처직원으로 근무하는 문화관광부 예하의 위원회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도박중독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카지노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고유권한 운운하며 관리·감독을 피하려하고 있고, 신분확인(ID카드)도입이나 장외판매점 폐지 및 인터넷 베팅 금지 등의 규제는 경마에만 적용하여 토토나 로또 등 여타 사행산업과 달리 지나치게 규제하는 등 당초의 사감위 설립 취지와 달리 어이없는 불공정 규제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도 마사회가 농림부로 이관된 이후 농민단체의 꾸준한 견제와 농림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경마산업은 이제 국민 레포츠로서 도박성이 통제되는 범위 내에 안착해 있다. 마권구매상한제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비롯하여 유권선

터(You Can Center)의 도박중독자 치유노력은 경마뿐만 아니라 카지노, 경륜, 경정, 로또 등 제반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까지 치유하는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뿐만 아니라 경마를 통해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농촌경제 기금으로 출연하고 경주마 생산과 연관된 말 생산산업을 통해 농축산업에 직접적인 기여는 물론 이와 연관된 사료, 승마 등 직간접적인 산업유발효과로 연간 6조 2천억원에 이르는 고비용의 산업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렇듯 농업과 연관된 경마는 농촌경제의 기간산업임을 인지하여 농민들의 3년여간의 피나는 투쟁을 통해 정부 감독기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시켰던 것이다.

2002년 매출액 220억원이던 토토가 2006년에는 9,131억으로 급성장하여 50%의 환급금과 25%의 운영비를 제하면 약 2,300여억원이 체육관련기금으로 충당되는 반면, 경마는 매출액이 5조3천억원이라 해도 환급금 72%, 레저세등 세금 18%를 제하고 경마운영비를 제하면 수익금이 1,200여억원 뿐이다. 세금체계만 보더라도 농어촌기금이 스포츠토토 보다 못한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바다이야기’ 파문 주역인 문광부가 마사회를 규제??

‘바다이야기’ 파문의 주역인 문화관광부가 사감위를 통해 마사회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농림부는 마사회의 규제와 관리책임이 농림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감위의 경마산업규제 중단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 규제대상에서 경마산업을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와 문화관광부, 사감위 등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든 주체들은 축산업의 위기를 초래하는 오늘의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작년 11월 9일 경마산업 발전을 촉구하는 농업인들의 서명용지를 국회 사무처에 전달하는 본 연합회 탁명구 사무총장